

# 최근 5년 원전화재 9건 중 5건 영광 한빛원전서 발생

신고도 안 하는 등 대응 부실  
신고 시간 1분~37분 제각각  
화재징후 소방서 신고 규정 없어  
김상희 의원 “신고 의무화 필요”

부실시공과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 정비·규제 당국의 느슨한 지도 감독에 더불어 원전에서의 화재가 원전 안전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영광 한빛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 5곳에서 9건의 화재 관련 사건이 발생했으나 관할 소방서 신고 시간 차이가 최소 1분, 최대 37분까지 벌어졌고 일부 사건은 외부 소방서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1986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 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규제 강화와 함께 원전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김상희 국회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수력원자력(원전사업자,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최근 5년간 화재 관련 사건은 모두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9건 가운데 5건은 광주에서 차량으로 50분 거리에 있는 영광 한빛원전에 집중됐다.

화재 관련 사건 9건 중 외부 소방서에 신고가 이뤄진 8건의 경우 자체소방대 출동요청시간과 관할 소방서 신고시간 차이가 최소 1분, 최대 37분까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각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원전 자체 소방대 출동 요청시간과 외부 소방서 신고 시간 차이가 37분이나 났던 시설은 영광 한빛원전으로 드러났다. 영광 한빛원전에는 모두 6기(基)의 원전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건

설된 제1호기 원자로 건물 냉각재 배관 보온재에서 지난 2019년 3월 9일 새벽 2시 20분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다. 그런데 원전사업자 측은 자체 소방대에 1분만인 새벽 2시 21분 신고했고 영광 소방서에는 37분이 지난 새벽 2시 58분에서야 화재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2018년 월성4호기 ‘감속재 상층기계계통 산소 주입 중 불꽃 발생’ 사건의 경우, 당시 매뉴얼은 원전 화재 발생 시 초동 및 자체소방대에 의해 초기 진압이 실패한 경우에만 관할 소방서에 출동요청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치가 없었다고 한수원은 의원실에 보고했다. 한수원 측은 “현행 규정은 감지기 작동, 연기, 타는 냄새 등의 화재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자체소방대에 출동지시를 하고, 실제 화재의 경우에만 외부 관할 소방서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 출동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고 한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화재징후와 실제 화재는 한끗 차이”라며 “대형화재의 시작은 작은 화재징후에서부터 비롯된다. 특히 원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한수원의 현행 규정은 화재 관련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부 소방서 신고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관할 소방서 인력의 현장 도착 시간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했던 신고리 4호기 화재사건 역시 ‘외부 소방서에 대한 늦은 신고조차’, ‘외부 소방인력 출입에 관한 매뉴얼 미흡’으로 소방관의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신고리 4호기 화재사건 당시, 화재 인지와 동시에 외부소방대에 즉시 신고해야 함에도, 자체 소방대보다 외부 관할 소방서 신고가 15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실제 화재뿐만 아니라 화재징후에 대해서도 원전 자체소방대와 외부 관할 소방서 동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외부 소방인력 출동상황에는 원자력발전소 출입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힘-토건 게이트 즉각 수사하라” 이재명 경기지사 열린캠프 대장동 TF 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은 국민의힘 측과 결탁한 민간 토건세력이 민간개발을 주도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힘-토건 게이트 당사자들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어준 “유동규 측근 질문 무의미” 이재명 엄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유씨가 (이 지사의) 측근이나 아니냐를 묻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사자가 돈을 안 받았다면 측근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측근 얘기를 하는 건 당사자가 돈 받은 게 안 나와서 하는 말”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대장동과 관련해 복잡한 뉴스들이 쏟아지지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간단하다. 우선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는가”의 문제라면서 “물론 부하직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다. 하지만 관리책임이나 묻자고 이렇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건 아니다. 당사자 뇌물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씨는 또 “성남시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민간에 특혜를 줘서 일부러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 질문을 하려면 몇 가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면서 “우선 공공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했는가? 아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공공개발을 원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발행을 막고 성남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모델보다 더 나은 민간 개발 모델이 있는가, 대장동 모델보다 더 많은 환수이익을 만들어낸 민관합동모델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씨는 이어 “없다. 이런 방식으로 이 정도 규모의 확정 환수 이익을 만들어낸 최초의 모델”이라면서 “이런 대장동 모델을 배임이라고 하려면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공공이익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모범사례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심상정, 과반 실패...정의당 대선후보 12일 결선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가 오는 12일 대선 경선 결선을 치른다.

정의당 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온라인 당원투표와 ARS(자동응답서비스)·우편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심 의원은 총 1만1828표 중 5433표(46.4%)로 1위에 올랐으나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 전 대표

는 4436표(37.9%)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윤기 전 부대표 1448표(12.3%), 황순식 전 경기도당위원장 386표(3.3%) 순이었다.

결선 투표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최종 후보는 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확정된다.

정의당 당헌은 대선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간 결선을 지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31.1%·윤석열 19.6%·홍준표 14.1%

### 케이스탯리서치...이낙연 10.1%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31.1%를 기록, 여야 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6일 발표했다.

케이스탯리서치가 경향신문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1%p·응답률은 21.0%)에 따르면 이 지사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가’ 질문에 31.1%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6%,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4.1%로 2, 3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0.1%, 유승민 전 의원은 2.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를 각각 기록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양자 가상대결 구도에선 이 지사가 43.4%로 윤 전 총장(35.7%)을 오차범위 밖에서 제쳤다. 홍 의원과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 지사가 43.2% 대 36.3%로 앞섰다. 이 전 대표는 윤 전 총장과 가상대결에서 39.0% 대 35.3%, 홍 의원과 39.1% 대 37.8%였다.

응답자의 51.0%가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0.5%는 “정권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nextcontentfair.co.kr

추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 BEXCO 부산광역시